

# 보건의료 개혁의 세계적 추세와 한국 보건의료 개혁의 전망

## 1. 우리나라는 선진국인가.

선진국이란 무엇인가? 기준이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세계은행은 선진국을 스위스, 일본,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에다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미국, 독일, 캐나다, 프랑스 등 19개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이처럼 19개 국가를 선진국으로 뽑은 기준을 아래의 7개 정도로 정하고 있다.

- 첫째, 나라의 소득이 높고 생활수준이 높아야 한다. 이때 고소득의 기준으로 일인당 국민 총생산이 8000달러를 삼고있다.
- 둘째, 그 나라의 인구가 적어도 100만명은 넘어서 국가의 형태는 갖추어야 한다. 즉 100만명 이하의 도시국가는 선진국에서 제외하고 있는것이다.
- 셋째, 그 나라의 경제제도는 자유경쟁을 통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시장경제 제도가 잘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 넷째, 한 국가의 공업화 수준이 상당한 정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손 명 세

로 발전해 있어야 한다.

- 다섯째, 경제협력 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OECD)의 회원국이어야 한다.
- 여섯째, 국민의 의식구조와 국가의 기본 이데올로기 및 정치제도 등이 경제성장에 걸맞도록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 일곱째, 국가에서 사는 국민의 생활의 질이 높아야 한다.

이상의 일곱가지 조건중 오늘의 한국은 적어도 세가지 조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즉 OECD의 회원국이 아니며 국민의

**국민생활의 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 **삶의 질 부분에 있어서** .....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 국민들이**  
**받는 의료의 질을 평가**

의식구조와 국가의 기본 이데올로기 및 정치제도 등의 정비가 지금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아직 좀더 정비되어야하며 국민의 삶의 질 부분은 향후 더 높여야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김영삼 행정부는 앞으로 2-3년 내에 선진국의 대열에 참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선 금년에 일인당 국민소득이 만달러를 상회할 예정이며 1996년에는 OECD에 가입하려고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통해 국민의 의식구조의 개선과 정치제도의 정비를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형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김영삼 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그 노력이 밑거름이 되어 빠른 시일내에 정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미래 지향적 정책 분석을 기초로 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완벽하게 갖추지는 못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 할지라도 한국이 선진국의 문턱을 넘고 있는 것은 어느정도 사실일 수 있겠다.

**2. 한국은 의료부분에 있어서도 선진국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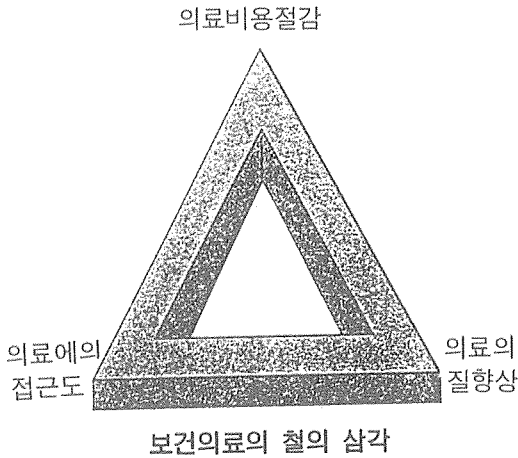
앞의 세계은행이 정한 선진국의 기준중 일곱번째 기준인 국민생활의 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삶의 질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 국민들이 받는 의료의 질을 평가한다면 그리 높은 평가를 받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료공급자의 질이 아무리 선진국 수준에 미치더라도 국민에게 주어지는 의료의 질이 보장되지 못하며 그결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할 수 없다면 의료에 있어서의 선진국이 될 수 없고 의료의 질에 있어서 선진국이 되지 못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의 선진국 진입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3. 선진국의 의료는 안정적인가**

우리가 흔히 선진국 의료의 대표적인 나라를 꼽을때 미국을 많이 거론한다. 실제로 미국의 의료의 질은 현재 세계 제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의료 정책학자들은 미국의 의료체계는 커다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으며 이 내용이 미국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쳐 정권 차원의 문제로 비화하기도 한다. 클린턴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미국의료제도 개혁을 내세웠고 임기중 가장 큰 노력을 경주한 사업의 하나로 부각시켜 나가고 있으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



영국도 선진국이며 이차대전후 의료제도를 혁명에 가깝게 변화시킨 나라이다. 이나라는 선진국 그룹인 OECD 국가중 의료비를 비교적 적게 쓰고 있는 나라이면서 그런대로 의료의 질 수준을 맞춰나가고 있다.

그러나 영국도 의료개혁이 진행중이다. 그 이유는 의료서비스의 유통이 이나라의 기본적인 사회경영원칙인 시장경제와 상당부분 간극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제도에 시장기능을 추가하는 형태로의 개혁을 보수당 행정부의 대처 총리이후 메이저 총리까지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앞서 이야기한 두나라 뿐 아니라 캐나다, 일본, 스웨덴등 선진국에서도 의료체계는 개혁의 대상이며 이는 의료분야의 경쟁력 뿐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개혁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전지구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서있는 국가와 선진국으로 진입하고자하는 국가에서 의료개혁이 주요 정책의제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 문제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개혁하여야 할 분야라고 할 수 있다.

#### 4. 세계적인 보건 의료 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전지구적으로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건의료개혁의 방향은 보건의료 체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각 국가는 효율성의 증진과 연관된 보건의료의 철의 삼각(Iron Triangle of Health care)을 각 국가의 형편에 맞게 조정한다. 의료의 철의 삼각은 의료에의 접근도(Access), 의료비용절감(Cost Containment), 그리고 의료의 질 향상(Quality)이다. 이 세가지의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한 개혁의 정책수단은 대체로 보건의료 부분에 대한 투자와 규제로 나뉘어진다. 그러나 OECD 국가에서의 규제는 기본적인 의료체계의 기능이 갖추어진 상태하에서의 규제이며 공급기반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규제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의료의 공급기반을 갖추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를 중심으로 한 정책수단을 중심으로 집행하고 있다. 즉 의료공급기반을 투자를 통해 정부의 재정에서 만들어 주고 운용비용에 대한 규제를 통해 정책수행을 하는것이라 할 수 있다.

OECD 국가들의 의료개혁도 그러한 정책 기조는 흔들지 않는 범위내에서 체계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경쟁기전을 도입하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촉진하여 규제를 적정화하여 의료체계의 합리성과 효율을 증진시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1994년에 의료비가 GDP의 14%가 넘어섰고 효율이 높다는 캐나다 역시

우리의 보건의료개혁은 현재까지 부족했던

보건의료 공급에 대한 투자가

확산되는 방향으로 하위 규제를 풀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교한 정책규제가 등장

10%를 넘었다. 이를 통해 전체를 유추하면 국민 생활의 질 즉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는 의료비는 GDP의 상당수준을 점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GDP의 상당부분을 점유하더라도 의료의 질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분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나라들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OECD 국가들이 진행하고 있는 의료개혁의 방향은 효율화, 합리화, 질에 대한 고려, 형평화, 탈규제, 다양화, 민간참여등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 5. 한국의 보건 의료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가?

한국도 대통령의 의지로 삶의 질을 중점과제로 선택하였으며 1994년에는 의료보장 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의료개혁 과제를 정리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한다.

방향역시 과거의 기초규제중심에서 합리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형태의 규제로 바뀔 것이며 기존에는 완전히 민간부문에 의존하고 있던 보건의료 공급 부문도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투자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그리고 선진사회로 진입할수록 생길것이 분명

한 다양한 보건의료문제를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나갈것이다.

특히 선진사회에 진입하게 되면 정책의 수립이 이론적 지식을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지적기술을 창조하며 지식계층이 확산되고 재화로 부터 서비스로의 변화가 이루어지며 과학이 수단화하면서 정보의 생산과 사용을 통해 합리성이 높은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의 보건의료개혁은 현재까지 부족했던 보건의료 공급에 대한 투자가 확산되는 방향으로 하위 규제를 풀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교한 정책규제가 등장하여 다양한 보건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방향의 개혁은 정부만의 몫이 아니며 전문가의 집단과 의료인 단체의 정책개발 노력에 의해 고무될 수 있다. 따라서 전문의료인 단체는 자신들과 관련된 정책에 합리성이 높고 논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제도에 파묻혀서 헤매고 있어서는 안된다. 외국의 제도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개혁이 가능할 것이다. 각분야가 자기몫에서 개혁에 참여한다는 가정하에 개혁의 미래는 밝다.